

주가 조작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간담회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감시체계 계좌기반→개인기반 전환
고의·중대 위반시 100% 과징금

정부가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한 번의 위반으로 퇴출’ 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을 자본시장에 본격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주가조작·불법공매도·허위공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 및 제재 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장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척결이 코스피 5000의 출발점”이라고 밝힌 이후 한 달 간 관계기관 집중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설치…AI 기반 감시체계로 전환

우선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긴급·중요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거래소에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관련해 브리핑 중인 모습. /신하은 기자

설치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는 시장심리(거래소), 조사(금감원·금융위)가 분산돼 있어 대응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합동대응단은 단일 공간에서 각 기관이 협업해 이상거래 종목을 조기 포착하고, 심리·임의조사·강제조사를 신속히 연계하는 ‘워룸(War Room)’ 체제로 운영된다.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고,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으로 구성된다. 전력자(재벌들 29.2%), 대주주·경영진, SNS·유튜브 기반 작

전세력 등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설정한다.

불공정거래 탐지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소의 감시체계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된다. 거래소는 회원사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수신해 계좌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식별이 어려운 기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로써 감시대상이 약 39% 감소하고, 자전거래나 시세관여율 등도 정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시스템에는 AI기술도 도입된다. 과거 심리 결과를 학습한 AI가 불공정거래 혐의 지표(Indicator)를 개선해 지능화된 작전기법도 조기에 포착하도록 고도화한다. 거래소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정지·과징금·임원선임제한까지…‘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적용

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최장 1년), 과징금 부과(최대 부당이득의 2배),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최장 5년) 등 3대 수단이 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계좌를 동결하고, 중대 사건은 외부에 적극 공표해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다.

불법 공매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고의·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주문금액의 1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기관제재나 자본시장 거래 제한 조치도 병행된다. 불법공매도 의심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조치를 적용해 자금 해외유출을 방지한다.

상장기업 퇴출제도도 손질된다. 현재 정부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은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기준이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 같은 기준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감사의견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3년 연속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야 상장폐지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이 역시 부실기업의 퇴출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브리핑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적발돼도 남은 장사’라는 인식을 반드시 깨야 한다”며 “7월 중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고, 3개월 내 개인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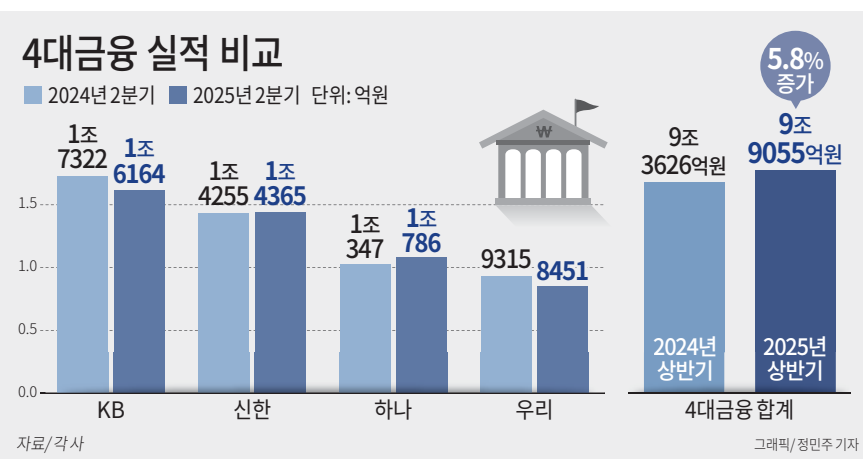
2분기 4대금융 순이익 5조… 상반기 기준 ‘역대최대’

KB·신한·하나·우리금융
순이익 전년 대비 3.72% 감소
상반기 순이익 9.9조, 5.8% ↑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2분기에 약 5조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예·적금 이율은 빠르게 내리고, 대출 금리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영향으로 천천히 내린 영향이다. 이자이익 외 비이자이익도 증가하며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4조9766억원으로 예상됐다. 1년 전 2분기(5조1688억원)와 비교해 3.72% 감소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금융의 2분기 순이익은 1조6164억원으로 1년



전인 1조7322억 원과 비교해 6.6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키움증권 김은갑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2분기 대손충당금과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환입이 1300억원 발생하며 이익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올해 2분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1년 전보다 110억원 증

가한 1조4365억원으로 관측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이자 이익이 일부 영향은 받았지만, 기업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그 영향을 상쇄했다. 연체율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지만, 대형 충당금을 적립할 이슈는 없다는 설명이다.

하나금융의 2분기 실적은 1조7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24% 증가할 전망

이다.

NH투자증권 정준섭 애널리스트는 “하나금융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자본 비율 민감도가 높다”며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하락 시 약 80~100원 손실·이익이 발생하는데 4~6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2분기 1000억~1200억원의 환 평가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같은 기간 864억원 감소한 8451억원으로 예상됐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가계대출과 대기업대출 위주로 대출 성장이 견조하다”면서도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프로젝트와 이낸싱(PF)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대 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9조9055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사유리 기자 yul115@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엔 황우여

국민의힘이 9일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사진)을 인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연 후 이같은 의결 사항을 밝혔다.

그는 “윤 원장은 처음부터 혁신위원장 유력 후보 중 한 분이였다”며 “아시다시피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앞으로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윤희숙 원장은 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력을 쌓았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으며, 국회 자유발언 시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연설을 해 유명세를 치렀다. 2021년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나,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대선 경선을 포기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 선대위에 합류하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선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과 승부를 벌였지만 낙선했다. 올해 1월 6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인선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전력수요 최고치 경신… 서민 전기요금 부담 낮춘다

한전, 9월까지 비상근무 체제 돌입
완화 주택 전기요금 누진구간 적용

이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 예비력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전력당국은 정전사태 대비를 위해 9월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등 서민 전기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6시 기준 전력수요는 95.7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 시간 기준 공급능력은 105.2GW, 예비력은 9.5GW로 전력예비율은 9.9%로 집계됐다.

통상 전력수요는 7월말에서 8월 초에 급증하는데, 올해는 2주 가량 빠르게 나타났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올 여름 전력 수요량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예비력이 10GW 미만으로 예비력이 10% 수준인 상황에서 발전설비나 전력망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례적 폭염으로 한여름 수준의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10GW 예비력이 원전 10기가 동시 공급하는 발전력에 해당하는 만큼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2만5000여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 예비력을 확보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여름에도 완화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적용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계 누진구간 완화는 2015년, 2016년, 2018년에 한시적 시행 이후 2019년 누진제 개편을 통해 상시 제대로 매년 시행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